

#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1)

강유덕2)

## 목차

I. 서론 II.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1. EU 경제제재의 특징 2.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III. EU-러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 1. EU-러시아 무역관계 2.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IV. 경제제재가 대러시아 무역에 미친 영향 1. 대러시아 수입 변화 2. 품목별 검토 3. 대러시아 수출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유럽연합(EU), 경제제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의존도, 석유, 천연가스	

## 국문요약

이 연구는 EU의 높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제재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제재 직전 EU는 역외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또한 총 에너지 수출의 70%가 대EU 수출일 정도로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수요자-공급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2013~16년의 기간 중 EU의 대러시아 수입은 43% 감소하였는데, 수입급감을 주도한 품목은 대러시아 총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품목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54%, 44%, 29%의 수입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치기준이 아닌, 물량기준(kg)으로 살펴보았을 때, 석유의 수입은 1% 감소하는데 그쳤고, 천연가스의 경우 오히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기준과 물량기준의 수입변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기간 에너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감소는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경제제재가 소기의 의도대로 기존의 에너지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사례는 EU의 공동외교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국가보다 외교적 명분과 안보, 경제적 실익 간에 균형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1) KIEP 러시아-CIS 분과 전문가포럼 발표를 위한 이 연구는 『통합유럽』 제8집 2집(통권 제15호, 2017년 9월호)에 게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한국의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조교수

## I. 서론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과 이를 전후한 군사적 행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태를 근린외교정책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EU의 경제제재는 당초, 크림자치 공화국과 러시아 정부의 일부인사에 한정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이후 러시아 금융기관과 군수물자에 대한 수출금지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또한 대EU 농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국경을 맞댄 양측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상호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한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들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 직접투자 등 경제적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외교적 수단이다.<sup>3)</sup> 경제제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이슈를 동기로 실시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일시적 중단 또는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형태의 외교적 압박수단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리력에 호소하지 않고, 500여 차례의 제재를 실시했다.<sup>4)</sup> 경제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다시 말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5)</sup>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강대국이 작은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실시하는데 반해,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2014년 기준 세계 9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강대국에 대한 제재이다.<sup>6)</sup>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의장국 간에 행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과거 미국과 EU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소규모 국가에 대해 행한 제재와는 국제정치 환경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둘째, EU와 러시아는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재는 매우 민감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EU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

3) 한국은행, <http://youth.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do?bbsId=6&mode=view&contentId=3287>(검색일: 2017. 7. 15.)

4) Emily Cashen,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World Finances* (April 20, 2017), <https://www.worldfinance.com/special-reports/the-impact-of-economic-sanctions>(검색일: 2017. 7. 15).

5) Kimberly Ann Elliott, *Evidence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Economic Sanctions*, Speech given before the Subcommittee on Trad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23, 1997) <https://piie.com/commentary/testimonies/evidence-costs-and-benefits-economic-sanctions>(검색일: 2017. 7. 15); Kimberly Ann Elliott and Gary Clyde Hufbauer, "In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Same Song, Same Refrain? Economic Sanctions in the 1990'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1999), pp.403-408; Richard Parker, "The Problem with Scorecards: How (and how not) to Measure the Cost-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2000), pp.235-294;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Kimberly Ann Elliott and Barbara Oegg,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Washington D.C., June 2009).

6) 작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큰 국가의 무역제재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William H. Kaempfer and Anton D. Lowenberg,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Sanctions," Todd Sandler and Keith Hartley, ed.,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 2 (Elsevier, 2007), p.874.

로 전개됨으로써 EU의 근린정책은 물론, 공동안보정책과 직결된다.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단호한 반면, EU에 있어서 이 제재는 공동안보정책의 실체에 대한 시험이다. 따라서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다. 셋째, 이 경제제재는 상호 경제의존도가 높은 인접국 간의 제재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 간의 제재와는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EU의 대러시아 수입은 1,198억 유로로 총 역외수입의 6.9%(4위)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065억 유로로 총 역외수입의 12.3%(2위)를 차지할 정도로 EU에게 있어 대러시아 무역은 중요하다. 특히 원유와 가스 수입에 있어 EU의 대러시아 의존도는 2013년 각각 31.9%와 32.4%에 달할 정도로 높다. 러시아 또한 전체 원유수출의 70%가 대EU 수출로 양측은 에너지 부문에 있어 밀접한 수요자-공급자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대러시아 수출이 총수출의 1%에 못 미치며,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거의 없다. 따라서 EU의 경제제재는 미국의 제재와 달리, 외교는 물론 경제적 함수까지 포함한 매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상호 간의 경제제재는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제재를 전후하여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이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와 EU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sup>7)</sup> EU-러시아 무역관계는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러시아의 총 에너지 수출 중 대EU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제재가 기존의 에너지 수요-공급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목적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3년의 기간 중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큰 구조적 변화를 줄 정도로 EU-러시아 에너지 무역이 변화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제재가 자국의 수입능력에 근거하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이다. 이 연구는 EU-러시아 간의 에너지 무역을 분석함에 있어 가치기준 뿐만 아니라, 무게기준까지 같이 검토한다. 2014~16년 기간 중 나타난 저유가 현상을 무역데이터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대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EU 및 회원국의 에너지 공급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수입의 80~10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을 장기간 상호제재가 진행 중인 외교적 분쟁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다.<sup>8)</sup> 세 번째 목적은 EU-러시아 간 에너지 무역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공급자로서 양측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외교적 압박수단으로서 이 제

7) Ian Bond, *The EU and Russia Uncommon Spaces*, Centre for European Reform (April 2014); Tatiana Romanova, *The Impact of Sanctions on Russia'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hatham House,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Meeting Summary(March 24, 2015); Konstantins Benkovskis, Jūlija Pastušenko and Julia Wörz, *Assessing the Full Extent of Trade Integration between the EU and Russia - A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Bank of Latvia(2014); Peter Havlik,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Ukraine Conflict,"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Policy Notes and Reports* No. 14(November 2014).

8) European Parliament, *EU-Russia Energy Relations - Stuck together?* (March 2015), p.2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5/551343/EPRS\\_ATA\(2015\)551343\\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5/551343/EPRS_ATA(2015)551343_EN.pdf)(검색일: 2017. 7. 15).

재가 갖는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문헌검토 외에 EU-러시아 간 무역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논의의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서론에 이은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경제제재를 통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EU-러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살펴봄에 있어 양측의 무역과 투자추이를 분석한다. 특히 양측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경제제재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에너지 분야와 EU-러시아 간에 무역제재가 진행 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 경제제재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II.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 1. EU 경제제재의 특징

#### 1)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제재

제재는 제재국이 제재 대상국에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가해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고자 하는 강압외교의 한 형태이다.<sup>9)</sup> 제재는 외교관의 소환, 외교관계의 단절과 같은 외교적 제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무기금수, 특정인에 대한 입국금지, 제재국 내의 자산동결, 경제제재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이 중 경제제재는 정부가 통상적인 무역, 금융관계에 대해 의도적으로 중단 또는 중단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10)</sup> 제재는 그 범위에 따라 포괄적 제재와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targeted sanc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재로 인한 피해가 대상국의 민간인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에 따라 점차 선별적 제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EU 차원의 제재는 그 관행에 있어 EC 출범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3주 체제의 두 번째 축인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이 형성되면서 부터이다. 외교정책으로서의 제재가 개별 회원국의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 EU 회원국은 단독으로 제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에는 대부분 EU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1)</sup>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EU의 제재는 1990년대 초에는 10개 미만이었으나, 1999년에는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37개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2)</sup> EU의 제재는 대외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동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EU 회원국 간 외교정책의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CFSP의 형성과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림 1>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통한 제재(sanctions regimes)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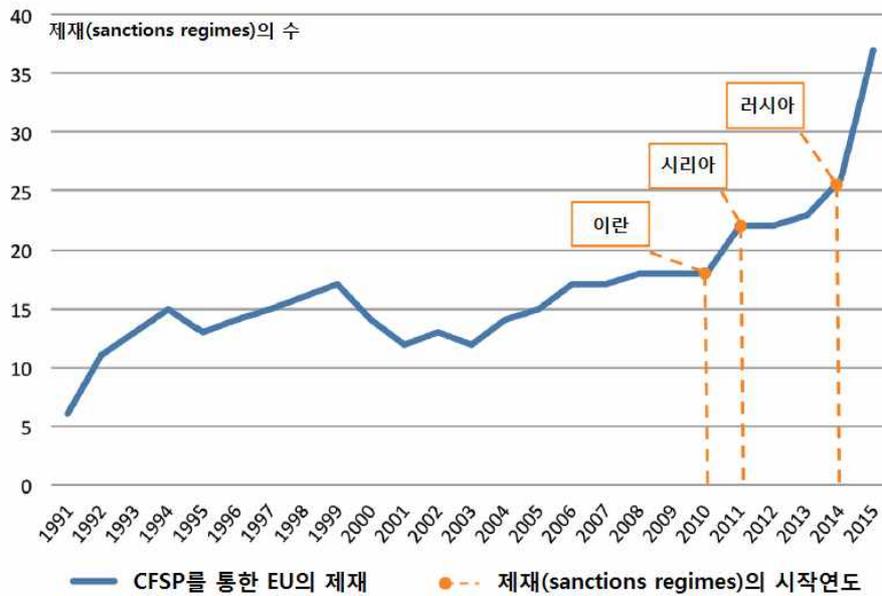
9) 전해원,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3(2016), p.1.

10) Hufbauer et al.(2009), p.3.

11) 전해원(2016), p.2.

12) 2017년 4월 기준 EU는 총 38개의 제재를 실시 중이다.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in force (April 26, 2017)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검색일: 2017. 7. 15).



자료: Anthonius W. De Vries, Clara Portela and Borja Guijarro-Usobiaga,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 Checklist for the EU," *CEPS Special Report* No. 95 (November 2014), p.2; Iana Dreyer and José Luengo-Cabrera, "Introduction," Ana Dreyer and José Luengo-Cabrera, ed., *On Target? EU Sanctions as Security Policy Tools*,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Paris, September 2015). p. 9.

EU의 제재는 독자성에 따라 ① UN 제재, ② 혼합제재(Mixed sanction regime), ③ EU의 독자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UN 제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를 EU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며, 혼합제재는 UN 안보리의 제재에 EU가 여타의 제재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EU의 독자제재는 UN 안보리의 결정과 상관없는 EU의 독자적인 조치로 EU의 목적과 가치에 반하는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테러, 핵 확산, 인권침해, 해외영토의 병합, 주권국가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2) EU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와 결정절차

EU의 경제제재는 CFSP의 일부로 EU 조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EU 이사회의 결정(decision)과 규정(regulation) 제정의 2단계를 통해 구성된다. 먼저 1단계인 EU 이사회의 결정은 외교안보고위대표(이하 '고위대표'로 지칭)와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고위대표가 의장을 맡는 EU 외교장관 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채택된다.<sup>13)</sup> 이 결정은 채택 전 이사회 내 해당지역의 담당 작업반과 정치안보위원회(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외교관계자문관 작업반(RELEX: Foreign Relations Counsellors Working Party), 그리고 회원국 EU 대사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COREPER II: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의 검토를 거친다. EU의 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제재의 기안을 지원한다(그림 2

13) 외교안보고위대표의 영문직함은 다음과 같다.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참조).

<그림 2> 제재를 위한 EU의 결정 절차



자료: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 Adoption and Review Procedure for EU Sanctions, <http://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adoption-review-procedure/>(검색일: 2017. 7. 15); 전해원 (2016), p.10 등을 참조한 저자의 구성.

만약 이사회의 결정이 자산동결 또는 기타 경제관련 제재로 확대되어 EU 공동체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2단계로 EU 기능조약(TFEU) 215조에 근거하여 EU 이사회의 규정(regulation) 제정이 필요하다. TFEU 215조는 EU가 CFSP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제3국과 경제·금융 관계를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고위대표와 EU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Council Decision)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규정을 발의하며, 이후 RELEX의 검토를 거쳐, COREPER로 송부된 후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결정된다. 이 규정은 정확한 범위와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작다는 점이다. 리스본 조약 체제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이 대폭 증가한 것과는 달리, 경제제재를 위한 규정의 결정과정에 유럽의회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는데 그친다.<sup>14)</sup>

## 2.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EU는 즉시 외무장관 이사회(3월 3일)와 EU 정상회의(3월 6일)를 개최하여 러시아와 진행 중인 비자면제 협정과 EU-러시아 협정의 협상 중단을 밝혔고, 같은 해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예정인 G8 정상회담에 불참을 결정했다. 이어 3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크림 자치공화국 및 러시아 인사에 대한 최초의 경제적 제재조치를 실시했다. EU의 첫 번째 제재조치는 크림 자치공화국 내 친러시아계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및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불인정 등 외교적 압박에 맞추어졌으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7월 17일) 이후 제재의 강도를 높였으며, 러시아 국적인사를

14) 물론 유럽의회는 결의안(resolution) 채택 등을 통해 경제제재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럽의회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통해 직접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포함하여 총 95명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23개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1>은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크게 외교적 조치와 경제적 제재조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제재조치에 있어 크림반도에 대한 조치는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금지, 무역 및 투자제한 등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며, 대러시아 제재조치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선별적 제재의 형식을 갖는다.

<표 1>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제재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외교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소치 G8 정상회담 불참(대신 2014년 6월 4-5일 브뤼셀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G7 정상회담 개최)</li> <li>• 러시아의 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협상 중단</li> <li>• EU-러시아 정상회의 취소 및 정례 양자회담 중단</li> <li>• 러시아와 비자면제 협상 중단, 양자 협력에 관한 신규협정(New Agreement) 협상 중지</li> </ul>
제한조치(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150명), 단체(37개)를 대상으로 한 EU 내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금지(개인에 적용)</li> <li>※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존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러시아의 정책결정을 지지하고, 크림반도의 병합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크림반도 소재 13개 단체를 포함</li> </ul>
크림반도에 대한 제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의 러시아합병을 비합법적으로 간주하는 불승인 정책(non-recognition policy)</li> <li>- 크림반도産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우크라이나 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제외)</li> <li>- 크림반도에 대한 투자금지: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 크림반도 내 부동산, 법인체를 매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li> <li>- 크림반도에 대한 여행서비스 제공금지(여행객 운항 및 기항금지)</li> <li>- 교통 및 정보통신, 에너지, 석유가스, 광물자원 채굴 분야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공급금지</li> <li>-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지원, 중개,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금지</li> </ul>
대러시아 분야별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 접근 금지: 러시아의 국영은행 및 에너지·방산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0일 이상의 신규채권, 주식,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금지</li> <li>※ 5개 국영은행, 3개 에너지 기업, 3개 방산 기업 및 관련 지점 대상</li> <li>- 군용물자 금수조치: EU 군용품목 리스트(common military list),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금지</li> <li>-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 제한: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 시 EU 회원국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심해 및 북극해 석유탐사 및 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제품의 경우 수출 라이선스 발급 금지 외</li> </ul>
경제협력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정상회의는 유럽투자은행(EIB)에 러시아 내 신규 금융활동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li> <li>• EU-러시아 간 양자,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대부분 중단</li> </ul>

자료: European Union Newsroom, Highlights: EU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crisis, [https://europa.eu/newsroom/highlights/special-coverage/eu-sanctions-against-russia-over-ukraine-crisis\\_en](https://europa.eu/newsroom/highlights/special-coverage/eu-sanctions-against-russia-over-ukraine-crisis_en) (검색일: 2017. 7. 18); 박정호·성원용·강부근,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자료 16-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30-31.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결정(CD: Council Decision)과 이에 근거를 둔 이사회 규정(CR: Council Regul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2>는 EU의 제재조치를 구성하는 결정과 규정을 크림반도에 대한 제재조치(1단계)와

대러시아 선별적 제재(2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CD는 자산동결과 같은 외교적 조치와 CR에 의해 시행될 경제·금융 관련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재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의 독자제재는 최소 12개월에 한번 연장 또는 중지를 위한 검토를 거치는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4개의 CD는 6~12개월의 효력을 가졌으며, 이후 재검토를 통해 연장되었다. 이에 반해 CR은 규정의 특성 상 EU의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무기한 발효된다.

EU는 2017년 4월 26일 기준 38개의 제재레짐(sanction regimes)을 실시 중인데,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를 대우크라이나(크림반도) 제재와 대러시아 제재로 구분한다.<sup>15)</sup> 이 중 대러시아 제재조치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은행이 발행한 만기 30일 이상의 채권 또는 금융상품이 그 대상이다. 제재대상 은행에는 스페르뱅크(Sberbank), 대외무역은행(Bank VTB),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 등이 포함되는데, 러시아 1~3위의 은행들이다. 둘째, 무역제재로서는 30여개 품목에 대해 대러시아 판매 시 관계기간의 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품목들은 주로 원유 및 가스채굴 장비와 관련된 부품들이다. 반면에 이 품목들이 심해석유와 북극원유 탐사 및 생산, 세일오일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셋째,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며, 군사관련 물품의 경우, 아예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표 2> EU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결정 및 규정 현황

분류	발표날짜	결정 및 규정	제목	주요 내용
자산동결, 입국제한, 크림반도에 대한 제한 조치	2014.3.5.	Council Decision (CD) 2014/119/CFSP  Council Regulation (CR) No 208/2014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 국가자금의 유용 및 인권위반에 관여한 인사 18인에 대한 자산동결</li> <li>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D 개정안 6회 발표</li> <li>CR 개정안 및 CIR 6회 발표</li> </ul> </li> <li>적용기간(CD): 2015.3.6(2014.3.5) →2017.3.6(2016.3.4)로 연장</li> </ul>
	2014.3.17	Council Decision (CD) 2014/145/CFSP  Council Regulation (CR) No 269/2014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주권, 독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입국제한</li> <li>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D 개정안 및 CID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18회 발표</li> <li>CR 개정안 및 CIR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21회 발표</li> </ul> </li> <li>적용기간(CD): 2014.9.17(2014.3.17) →2016.9.15(2014.3.17)로 연장</li> </ul>
	2014.6.23	Council Decision (CD) 2014/386/CFSP	'크림 및 세바스토폴 불법 합병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지역이 원산지인 상품의 EU 내 수입과 관련 직간접적인 자금조달 및 인프라(교통, 통신, 에너지) 설비 및</li> </ul>

1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in force* (April 26, 2017),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검색일: 2017. 7. 18).

		Council Regulation (CR) No 692/2014	해당지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CD, 2014.6.23)  '크림 및 세바스토폴 불법 합병에 따른 제한 조치에 대하여'로 변경(CD, 2014.7.30)	기술 판매, 공급, 이전을 금지 ● 개정안 발표 - CD 개정안 3회 발표 - CR 개정안 2회 발표 ● 적용기간(CD): 2015.6.23(2014.6.23) →2016.6.23(2015.6.19) →2017.6.23(2016.6.17)로 연장
대러시아 분야별 경제제재	2014.7.31	Council Decision (CD) 2014/512/CFSP  Council Regulation (CR) No 833/2014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화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하여'(CD)	● 대러시아 분야별 경제제재 (2014년 8월 1일 이후의 신규계약에만 적용) - 러시아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은행(상업은행, 개발은행 및 해외자회사)이 발행한 만기 90일 이상인 채권,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이후 9월에는 만기일 30일 이상인 채권으로 금융제재를 강화). ※ 5대 제재 대상은행: 스베르방크(러시아 1위 상업은행), 대외무역은행(VTB, 2위), 가스프롬방크,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로셀크호즈방크 - 30개 품목(HS 6~8단위 기준)의 대러시아 판매 시 EU 회원국 관계기관의 허가가 의무화(주로 석유, 가스채굴 장비의 관련 부품) - 상기 품목이 심해석유와 북극원유 채굴 및 생산, 세일오일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판매를 불허 -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나 전자 제품 등 이중용도품목(Dual Use Goods)의 대러시아 수출을 제한, 이 물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 중개, 금융지원을 금지 - EU의 일반무기 리스트에 있는 군사관련 물품의 경우 대러시아 수출과 수입이 금지 ● 대러시아 분야별 경제제재 ● 개정안 발표 - CD 개정안 4회 발표 - CR 개정안 3회 발표 ● 적용기간(CD): 2015.7.31(2014.7.31) →2016.7.31(2015.12.21)로 연장 →2016.1.31(2016.7.1)로 재연장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7), 박정호·성원용·강부균 (2016), pp. 32-33, 강유탁·이현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7(2014년 9월 5일), p.4.

EU의 대러시아 제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가 채택한 일련의 제재조치들은 선별적 제재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EU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며, 이에 제재는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금융제재는 정부의 지분을, 금융상품의 만기일 등을 조건으로 설정되었으며, 에너지 관련 품목들의 수출금지도 특정 분야에 한정시켰으며, 기존에 진행되어온 프로젝트는 제

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별적 적용은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EU의 제재는 같은 기간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보다 그 범위와 정도가 약하다.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7개 에너지 기업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EU는 3개만 포함하였고, 에너지 대상 제재 품목도 EU의 경우, 그 수가 미국의 제재보다 적다.<sup>16)</sup> 이는 EU-러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EU의 제재가 외교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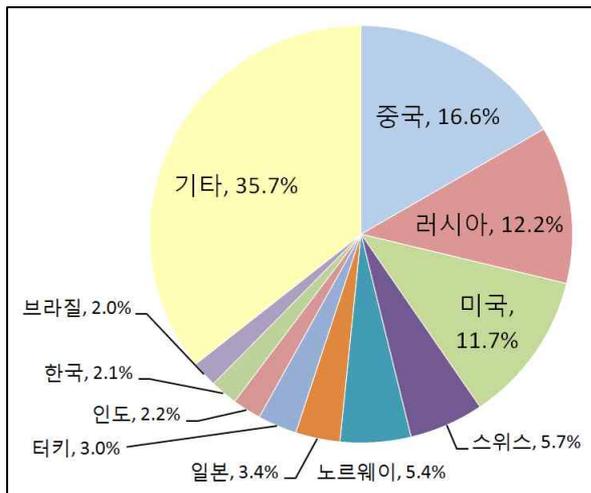
16) 박정호·성원용·강부균(2016), p.48~49.

### III. EU-러시아 경제관계의 특수성

#### 1. EU-러시아 무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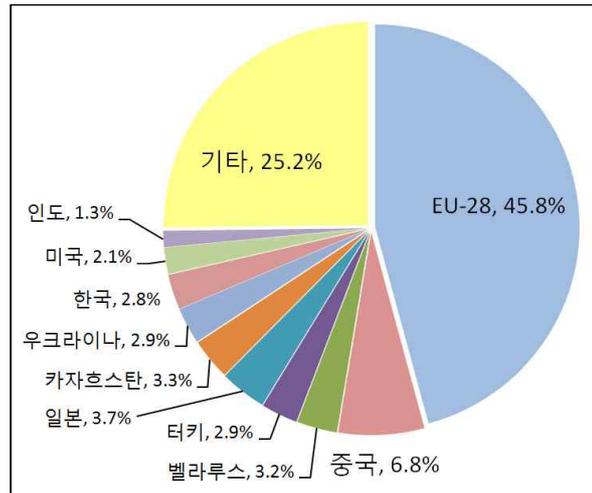
러시아는 EU의 주요 수출국이자, 매우 중요한 수입국이다. 경제제재 이전의 자료를 살펴 보면 2013년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1,194억 유로로 EU의 총수출 중 6.9%(4위)를 차지했으며, 수입은 2,070억 유로로 총수입 중 12.3%(2위)를 차지했다(Eurostat 역외무역 기준). 러시아 또한 대EU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EU 수출은 러시아 총수출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수입 또한 러시아 총수입의 42.6%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관계 상 양측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sup>17)</sup> EU의 대러시아 무역관계와 그 특징은 EU의 대러시아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아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EU의 대러시아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러시아가 EU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EU의 대러시아 수입 중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 비중은 총수입의 70%를 상회한다. 석유·가스 분야는 러시아 총수출의 70%를 차지하는데, 특히 EU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룬다. 대EU 수출은 러시아 총 석유수출의 84%, 총 가스수출의 76%를 차지한다.<sup>18)</sup> 따라서 양측 간에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 밀접한 수요자-공급자 관계가 형성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측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EU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는데, 2011년 대러시아 무역적자는 927억 유로에 달하였다.

<그림 3> EU의 주요 수입대상국(상품)  
(2013년 기준, 비중)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the European Union (May 18, 2015), p.180.

<그림 4> 러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상품)  
(2013년 기준, 비중)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Russian Federation (August 24, 2016), p.163.

17)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Russian Federation (August 24, 2016), p.163, p.165.

18) 박정호·성원용·강부균(2016), p.24; BBC, Russia's trade ties with Europe, March 4, 2014,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6436291>(검색일: 2017. 7. 18)

<표 3> EU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연간	대러시아 수출			대러시아 수입			무역수지	총무역
	1억 유로	연간변화율	비중	1억 유로	연간변화율	비중	1억 유로	1억 유로
2006	724		6.3	1,436		10.5	-712	2,160
2007	892	23.2	7.2	1,477	2.9	10.2	-585	2,369
2008	1,050	17.7	8	1,804	22.1	11.4	-755	2,854
2009	657	-37.4	6	1,196	-33.7	9.7	-539	1,853
2010	863	31.4	6.4	1,621	35.6	10.6	-758	2,484
2011	1,086	25.8	7	2,013	24.2	11.6	-927	3,099
2012	1,235	13.7	7.3	2,151	6.9	12	-917	3,386
2013	1,194	-3.3	6.9	2,070	-3.8	12.3	-875	3,264
2014	1,032	-13.6	6.1	1,824	-11.9	10.8	-792	2,856
2015	737	-28.6	4.1	1,364	-25.2	7.9	-627	2,101
2016	724	-1.8	4.1	1,188	-12.9	7	-464	1,912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May 3, 2017, p. 8.

<표 4>는 대러시아 수출입을 EU 회원국별로 살펴보았다. 대러시아 수입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러시아 수입이 경제규모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EU 역내의 중개무역지로서 네덜란드의 역할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러시아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무역수지에 있어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중동부유럽의 소규모 국가들이다. 총역외무역에 있어 대러시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수입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큰데, 아일랜드, 영국 등은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이 총역외수입의 4% 미만인데 반해,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30%를 상회하며, 핀란드와 리투아니아는 50%를 상회한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EU 회원국별 에너지 공급에 있어 대러시아 의존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러시아 수출비중의 경우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일수록 높는데, 특히 발트 3국의 경우 40%를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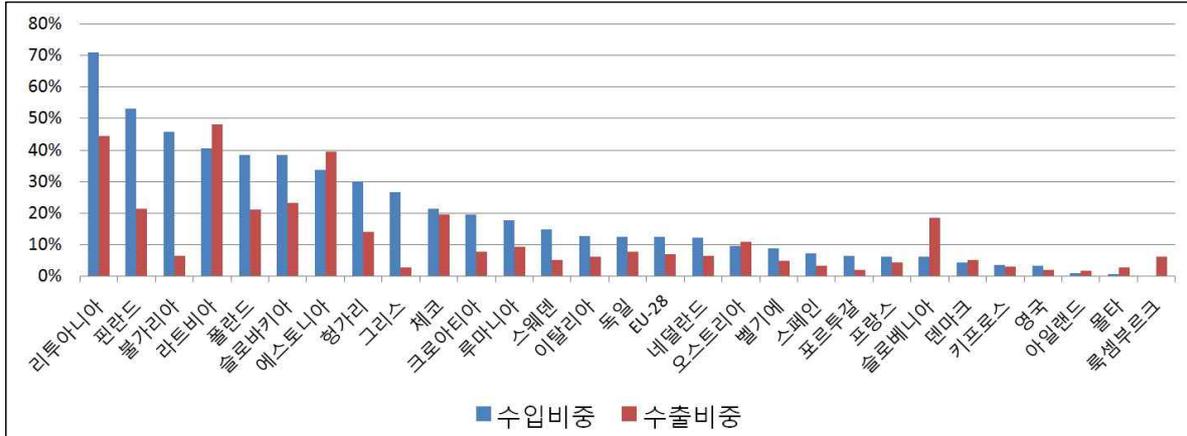
<표 4>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무역

순위	회원국	수입		수출		무역수지	순위	회원국	수입		수출		무역수지	
		가치	비중	가치	비중				가치	비중	가치	비중		
1	독일	391.3	12.4	357.9	7.6	-33.4	15	체코	53.8	21.4	44.7	19.4	-9.1	
2	네덜란드	289.7	12.2	79.6	6.5	-210.1	16	불가리아	47.8	45.9	5.8	6.5	-42.0	
3	이탈리아	202.0	12.6	107.7	6.0	-94.3	17	오스트리아	30.7	9.5	43.1	10.9	12.4	
4	폴란드	186.5	38.5	81.1	21.0	-105.4	18	루마니아	23.6	17.6	13.8	9.2	-9.8	
5	핀란드	104.9	53.2	53.6	21.4	-51.3	19	라트비아	10.9	40.5	17.6	48.1	6.7	
6	프랑스	102.6	6.2	77.2	4.3	-25.4	20	크로아티아	10.7	19.5	2.8	7.7	-7.9	
7	벨기에	99.9	8.7	51.1	4.8	-48.8	21	포르투갈	10.0	6.3	2.6	1.9	-7.4	
8	스페인	81.0	7.1	28.1	3.2	-52.9	22	덴마크	9.5	4.4	15.6	5.1	6.1	
9	영국	79.7	3.3	46.7	2.0	-33.0	23	에스토니아	8.4	33.7	14.1	39.5	5.7	
10	리투아니아	73.7	70.9	48.7	44.6	-25.0	24	슬로베니아	4.6	6.1	11.9	18.5	7.3	
11	그리스	66.2	26.7	4.0	2.8	-62.2	25	아일랜드	1.4	0.8	6.3	1.7	4.9	
12	헝가리	64.0	30.0	25.3	14.1	-38.7	26	키프로스	0.5	3.6	0.2	3.1	-0.3	
13	슬로바키아	60.6	38.3	25.5	23.2	-35.1	27	몰타	0.1	0.7	0.4	2.6	0.3	
14	스웨덴	55.5	14.7	27.3	5.1	-28.2	28	룩셈부르크	0.0	0.0	1.6	6.1	1.6	
									EU-28	2,070	12.3	1,195	6.9	-875.2

주: 2013년 기준. 가치는 백만 유로이며, 비중은 각 EU 회원국의 총역외수출입에서 대러시아 수출입이 갖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그림 5> 회원국별 대러시아 수출입비중(%)

(2013년 기준)



주: 수입비중을 기준으로 정렬.  
자료: Eurostat.

품목별 대러시아 무역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대러시아 총수입의 77.8%가 원유·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원유·가스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은 EU 총수입의 1/3에 달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반면에 대러시아 수출은 원유·가스를 제외한 다양한 품목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계 및 수송장비의 비중이 높다. EU-러시아 무역관계는 EU가 에너지를 수입하고, 소비재 및 장비를 수출하는 형식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 EU의 품목별 대러시아 무역(2013년, SITC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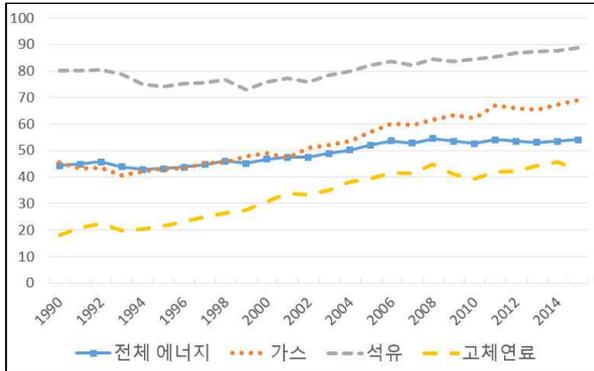
	수입			수출		
	규모 (백만 유로)	대러 총수입 중 비중	EU 총수입 중 비중	규모 (백만 유로)	대러 총수출 중 비중	EU 총수출 중 비중
0 식료품 및 육류	1,175	0.6	1.4	8,757	7.3	11.6
1 음료와 담배	82	0.0	1.1	1,682	1.4	5.8
2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3,663	1.8	5.4	1,742	1.5	4.3
<b>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b>	<b>160,589</b>	<b>77.8</b>	<b>32.2</b>	1,106	0.9	0.9
4 동식물성의 유지 및 왁스	441	0.2	5.1	445	0.4	9.3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 및 관련제품	6,266	3.0	4.0	20,153	16.8	7.4
6 재료별 제조제품	12,329	6.0	7.5	12,584	10.5	6.3
7 기계 및 수송장비	1,971	1.0	0.5	56,705	47.3	8.0
8 기타 제조제품	434	0.2	0.2	14,920	12.5	8.2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3,303	1.6	8.1	1,094	0.9	1.1
기타	16,225	7.9	-	587	0.5	-
합계	206,478	100	12.3	119,775	100	6.9

주: 대러시아 경제제재 이전의 무역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April 16, 2014, p. 5.

## 2.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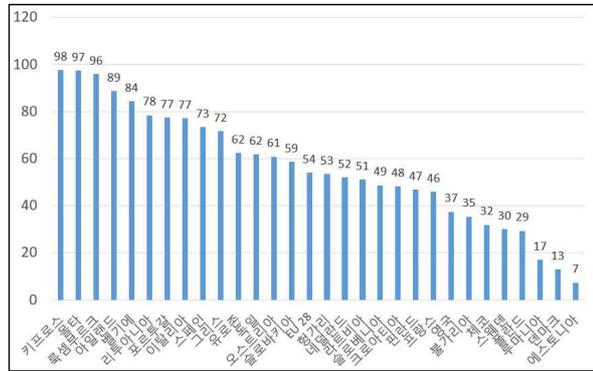
2015년 기준 EU는 에너지 소비의 54%를 외부에서 수입할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Energy dependence)가 높다.<sup>19)</sup> 화석연료를 석유, 가스, 고체연료(주로 석탄)로 구분할 경우, 2015년 석유의 에너지 의존도는 88.8%에 달하며, 가스는 69.1%, 고체연료는 42.8%를 기록하고 있다. CO2 배출억제를 위한 에너지 효율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에 따라 EU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고 있으나, EU의 에너지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그림 6). 특히 가스의 에너지 의존도는 2030년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sup>20)</sup> 에너지 의존도를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자체적인 에너지원의 생산이 있거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적은 국가의 경우(영국, 덴마크 등), 에너지 의존도가 낮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석유의 경우 28개 회원국 중 21개 국가의 의존도가 90% 이상이며, 50% 미만인 국가는 영국을 포함한 3개 국가에 불과하다. 가스의 경우에도 18개국에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

<그림 6> EU의 에너지 의존도



자료: Eurostat.

<그림 7> EU 회원국별 에너지 의존도(2015년)



자료: Eurostat.

<표 6> EU의 에너지 의존도(2015년)

전체에너지		가스		석유		고체연료	
국가	의존도	국가	의존도	국가	의존도	국가	의존도
키프로스	97.7	에스토니아	100	그리스	105.4	네덜란드	112.4
몰타	97.3	그리스	99.9	스웨덴	105.4	크로아티아	103
룩셈부르크	95.9	포르투갈	99.8	핀란드	104.5	이탈리아	100.2
아일랜드	88.7	리투아니아	99.7	아일랜드	103.9	키프로스	100
벨기에	84.3	핀란드	99.7	벨기에	103.8	룩셈부르크	100
리투아니아	78.4	슬로베니아	99.6	라트비아	102.9	포르투갈	100
포르투갈	77.4	룩셈부르크	99.4	키프로스	102.8	프랑스	98.4
이탈리아	77.1	벨기에	99.3	스페인	102.1	벨기에	97.2
스페인	73.3	스웨덴	99.1	네덜란드	101.5	스웨덴	92.3
그리스	71.7	프랑스	98.7	리투아니아	100.7	리투아니아	87.1
유로존	62.4	라트비아	98.6	포르투갈	99.7	오스트리아	85.2
독일	61.9	불가리아	97	슬로베니아	99.6	덴마크	85
오스트리아	60.8	스페인	96.9	룩셈부르크	99.3	라트비아	84.7

19) 에너지 의존도(Energy dependence)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지 정도를 나타낸다. 이 지수는 총 에너지 소비와 비축량 대비 순에너지 수입의 비율(%)로 계산된다.

20) Fatih Birol, *Outlook for European Gas Demand, Supply and Investment to 203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5, 2005), p.4.

슬로바키아	58.7	아일랜드	96.5	불가리아	99.2	슬로바키아	84.6
EU 28	54	체코	95.1	프랑스	98.5	스페인	78.3
헝가리	53.4	슬로바키아	95.1	유로존	98.1	아일랜드	66.8
네덜란드	52.1	이탈리아	90.4	체코	97.8	영국	65.4
라트비아	51.2	독일	90.1	몰타	97.8	유로존	62.2
슬로베니아	48.7	유로존	78.6	폴란드	96.8	핀란드	61.2
크로아티아	48.3	오스트리아	72.5	독일	96.4	독일	45.5
핀란드	46.8	폴란드	72.2	오스트리아	94	EU 28	42.8
프랑스	46	헝가리	69.7	헝가리	93.2	헝가리	34
영국	37.4	EU 28	69.1	이탈리아	89.5	슬로베니아	18.9
불가리아	35.4	영국	41.8	슬로바키아	89.4	루마니아	17.4
체코	31.9	크로아티아	27.1	EU 28	88.8	불가리아	11.2
스웨덴	30.1	루마니아	1.8	크로아티아	79.6	그리스	2.8
폴란드	29.3	네덜란드	-32.1	루마니아	53.5	에스토니아	-0.3
루마니아	17.1	덴마크	-48	에스토니아	39.4	체코	-1.8
덴마크	13.1			영국	36.4	폴란드	-11.6
에스토니아	7.4			덴마크	5.8		
노르웨이	-585.9	노르웨이	-1795.4	노르웨이	-682.1	노르웨이	0.2

주: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단일시장의 일부이며, EU 역내에 에너지 수출이 많은 관계로 에너지 의존도가 음의 값을 갖게 됨.

자료: Eurostat.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EU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표 7>은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3년 기준 EU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을 정리하였다. EU의 총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스가 32.6%, 석유가 26.1%, 고체연료(석탄)가 2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총수입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까지 포함한 것으로, 만약 역외수입으로 한정할 경우, 대러시아 수입비중은 더욱 증가한다.<sup>21)</sup> 러시아에 이은 두 번째 수입국은 가스와 석유에 있어 노르웨이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가스 및 석유 수입에 있어 러시아의 높은 비중은 장기적, 구조적인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대러시아 수입비중은 가스가 30% 전후, 석유는 25% 전후 수준을 유지해 왔다. 반면에 1990년까지 분석의 시기를 확대할 경우, 가스와 석유는 대러시아 수입비중에 있어 반대의 추이를 보인다. 대러시아 가스수입은 1990년대 초 EU의 총수입 중 5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노르웨이산 가스수입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28~30%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반면에 석유 수입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10% 이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줄곧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25% 수준에 이르렀다. 요약하면, 가스수입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다변화 현상이 다소 있었으나, 석유에 있어서는 대러시아 수입으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표 7> EU의 화석연료 수입(2013년)

가스			석유			고체연료		
수입국	수입량 (백만 큐빅미터)	비중 (%)	수입국	수입량 (천 톤)	비중 (%)	수입국	수입량 (천 톤)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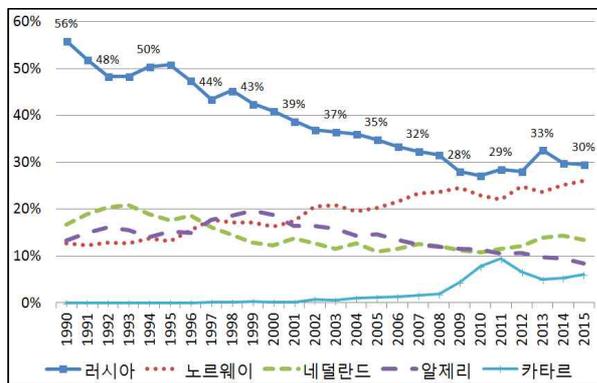
21) 네덜란드와 영국은 EU 역내의 산유국(북해산 브렌트유)으로 EU의 가스 및 석유수입에 있어 대네덜란드 수입은 각각 13.9%와 5.3%를 차지하며, 대영국 수입은 2.3%와 4.8%를 차지한다.

러시아	135,159	32.6	러시아	231,748	26.1	러시아	67,526	25.9
노르웨이	98,119	23.7	노르웨이	69,043	7.8	콜롬비아	51,219	19.6
알제리	40,667	9.8	사우디아라비아	46,193	5.2	미국	50,931	19.5
카타르	21,189	5.1	나이지리아	41,311	4.7	호주	17,532	6.7
원산지 불명	13,840	3.3	리비아	31,589	3.6	남아공	15,671	6.0
리비아	5,705	1.4	카자흐스탄	31,229	3.5	원산지 불명	11,240	4.3
트라이드 토도	2,360	0.6	알제리	28,408	3.2	인도네시아	7,199	2.8
페루	1,503	0.4	아제르바이잔	23,776	2.7	우크라이나	3,530	1.4
터키	680	0.2	미국	22,942	2.6	노르웨이	1,295	0.5
이집트	297	0.1	이라크	18,459	2.1	모잠비크	665	0.3
총수입	414,031	100	총수입	886,559	100	총수입	260,758	100

주: 역외수입국만 명시하였으며, 총수입에는 역내수입도 포함되었음.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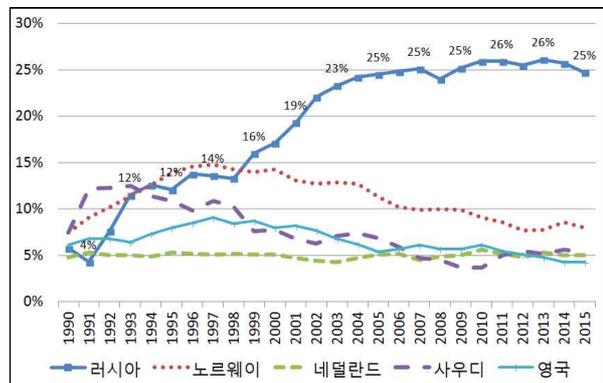
<그림 8> EU의 가스 수입 중 비중변화



주: 가스수입량의 단위는 백만 큐빅미터임.

자료: Eurostat.

<그림 9> EU의 석유 수입 중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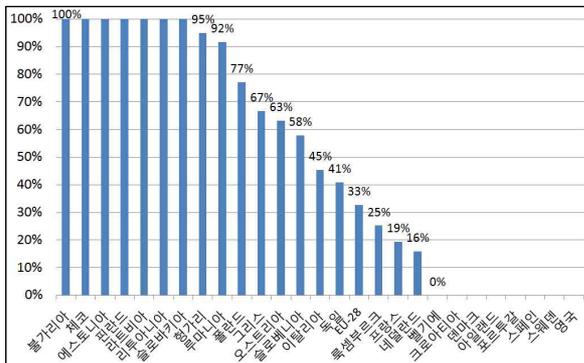
주: 석유수입의 단위는 천 톤임.

자료: Eurostat.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있어 큰 특징은 회원국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먼저 가스 수입의 경우 중동부유럽과 서유럽 국가 간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거의 전량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찍이 수입처를 다원화시킨 바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아예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통계자료가 확보된 EU 26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 체코, 발트 3국 등 7개국은 가스 수입의 10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반해, 북해 및 중동, 아프리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8개국은 아예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 석유 수입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고,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수입처가 다원화되어 낮은 대러시아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회원국별 대러시아 의존도는 가스 수입에 비해 낮고, 국가 간 의존도의 차이도 전량 수입 또는 수입량 전부와 같이 중동부유럽-서유럽 간 극명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스와 석유의 운송 및 공급방식의 차이에 있다. 첫째,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데, 가스의 운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는 큰 고정비용과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파이프라인 통과국의 지정학적 안정성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면에 한번 건설된 이후에는 운송비용은 해상을 통한 운송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입은 장기간에 걸친 수요-공급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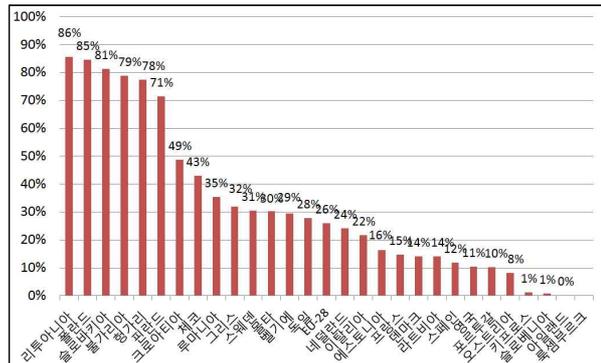
이에 반해 원유운송의 경우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가스수입에 비해 수입처의 다원화에 용이하다. 둘째, 가스 공급의 경우 운송방식의 차이로 인해 공급계약이 장기적으로 체결되며, 수요-공급에 있어 경제적 실리 외에 지정학적 관계가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석유의 경우, 공급처가 다양한 비차별재로서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선 전환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림 10> 회원국별 대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2013년)



자료: Eurostat.

<그림 11> 회원국별 대러시아 석유 수입 비중(2013년)



자료: Eurostat.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높은 대러시아 가스의존도는 EU 차원의 공동에너지 정책이 필요한 배경이 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중동부유럽 회원국 중, 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EU 차원의 단일에너지시장을 설립하거나 공동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sup>22)</sup> 특히 2009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위기 이전까지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처로 간주하였다.<sup>23)</sup> 또한, 수입처가 다원화 되어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와의 가스 수입 가격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러시아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sup>24)</sup> 이러한 차이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정책 및 에너지 정책에 있어 이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공동에너지 정책 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22) Keith C. Smith, *Russia-Europe Energy Relations: Implications for US Polic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ebruary 2010), p.6.

23) *Ibid*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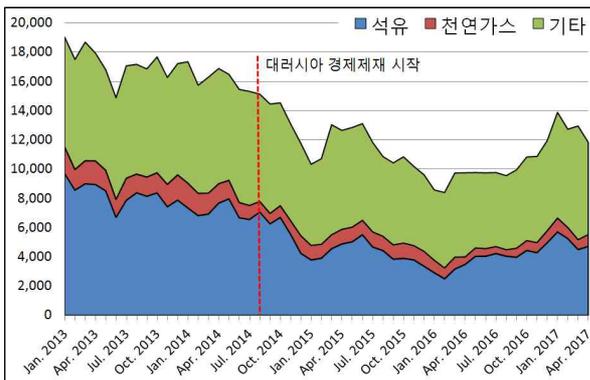
24) Forbes, “U.S. L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Taking Diversification Seriously,” (July 11, 2017) <https://www.forbes.com/sites/thebakersinstitute/2017/07/11/u-s-lng-in-cee-diversification/#374e76104d0a>(검색일: 2017. 7. 20).

#### IV. 경제제재가 대러시아 무역에 미친 영향

##### 1. 대러시아 수입변화

대러시아 경제제재(2014년 8월) 이후 대러시아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품목은 대러시아 수입의 55~60%를 차지하는 석유와 가스이다. <그림 12>에 제시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월별데이터의 특성 상 변동이 있으나,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반까지 감소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도별 기준으로 2013년 석유수입은 989억 유로였으나, 2016년에는 458억 유로로 감소, 54%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2017년 1~4월 기간의 월별데이터에 따르면,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이전의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탄 수입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대러시아 수입을 가치가 아닌, 무게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 무게기준의 수입량은 석유의 경우 2013~14년의 기간 중 극감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16년에는 경제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천연가스의 경우 오히려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또한 석탄의 경우 2013~14년의 기간 중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이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가치기준과 무게기준의 통계를 조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 EU의 대러시아 수입 추이(100만 유로)



자료: Eurostat.

<표 8> EU의 대러시아 수입 추이(10억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3 ~16 (%)
석유	78.0	99.4	109.9	98.9	79.4	51.3	45.8	-54
천연 가스	27.9	33.0	34.3	36.2	29.9	26.2	20.4	-44
석탄	3.6	4.7	4.9	4.5	4.2	3.7	3.2	-29
에너지 합계 (비중)	110.1 (67.9)	133.5 (68.8)	149.9 (69.7)	140.4 (67.8)	114.1 (62.6)	81.8 (60.0)	69.9 (58.7)	-50
총수입	162.1	201.3	215.1	207.0	182.4	136.4	118.9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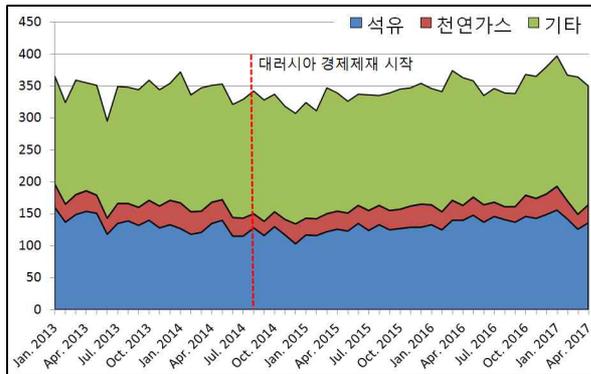
주: 1) 석유(HS 27090090), 2) 천연가스(가스상태, HS 27112100), 석탄(HS 2701). 2) 마지막 열은 2013~16년 기간의 변화율(%)

자료: Eurostat.

<그림 13> EU의 대러시아 수입 추이(1억 kg)

<표 9> EU의 대러시아 수입 추이(백만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3 ~16 (%)
석유	1791	1715	1726	1655	1457	1498	1637	-1
천연	850	843	776	843	798	820	890	6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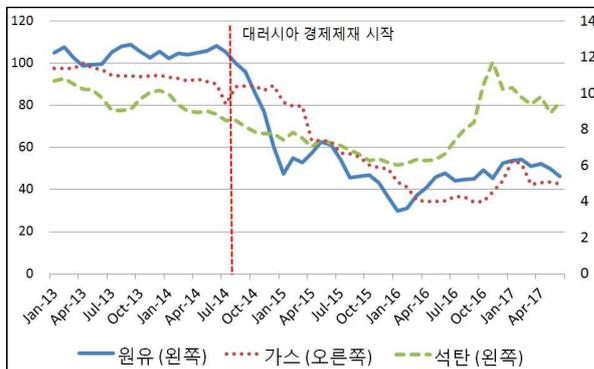
가스								
석탄	451	432	515	568	573	527	490	-14
에너지 합계	3121	3050	3041	3099	2859	2877	3051	-2

주: 1) 석유(HS 27090090), 2) 천연가스(가스상태, HS 27112100), 석탄(HS 2701). 2) 마지막 열은 2013~16년 기간의 변화율(%)

자료: Eurostat.

공교롭게도 국제원자재 가격은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전후하여 극감하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05달러로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에 나타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중 국제유가는 폭락하여 1년 후인 2015년 8월에는 배럴당 45.72 달러로 50% 이상 하락했으며, 2016년 1월에는 29.92 달러로 2014년 8월 대비 70% 하락하였다. 이후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나, 2017년 6월 기준 배럴 당 46.13 달러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산 독일 인도분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2014년 8월 100만 BTU 당 10.4 달러였으나, 이후 극감하여 2016년 5월에는 3.99 달러를 기록, 61.8%의 가격하락을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보다 가격하락 추이가 8개월 정도 더 지속되었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 2017년 6월 기준 백만 BTU 당 5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석탄의 경우에도 대러시아 경제제재 처음 18개월간은 30%에 가까운 가격하락세를 보였고,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원유 및 가스, 석탄의 국제가격 추이(US 달러)



주: 1) 원유는 세계 3대 유종(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의 평균이며, 1배럴 당 가격임. 2) 가스는 러시아산 가스의 독일국경 인도가격이며, 백만 BTU(British Thermal Unit) 당 가격임. 3) 석탄은 호주산과 남아공산 석탄의 수출가격을

<표 10> 원유 및 가스, 석탄의 국제가격 추이 비교

	대러 경제제재 시작 (2014.8)	최소		최대 (시기)	평균	
		가격 (시기)	변화		가격	변화
원유	100.1	29.9 (2016.1)	-70.1%	100.1 (2014.8)	52.9	-47.2%
천연 가스	10.4	4.0 (2016.9)	-61.8%	10.5 (2014.12)	6.4	-38.3%
석탄	72.7	51.7 (2016.1)	-28.9%	100.4 (2016.11)	67.5	-7.2%

주: <그림 14>와 동일.

자료: Indxmundi.com

평균한 값이며, 1톤 당 가격임.  
자료: Indexamundi.com

이와 같은 에너지 원자재의 동시적인 가격하락은 첫째, 공급과 수요측면의 원인과 둘째, 에너지 원자재 간에 성립하는 대체관계, 셋째, 에너지 수입에 있어 유럽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위의 기간 중 국제유가는 공급과 수요측면의 요인이 모두 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급측면의 요인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확대는 원유 및 가스공급의 증가를 가져온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의 증산은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켰다. 수요측면에서는 중국, 유럽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의 성장을 감소에 이에 따른 원유수요의 감소는 공급과잉과 조응하여 큰 폭의 가격하락을 초래했다.<sup>25)</sup> 둘째, 에너지 원자재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특히 원유와 천연 간에는 유사한 사용용도로 인해 같은 방향의 가격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두 원자재의 가격 간 상관관계에 있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26)</sup> 반면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두 원자재 간에 전용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점, 투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자재라는 점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쉽다.<sup>27)</sup> 셋째,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스공급 가격은 원유가격에 연동된 장기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네덜란드産 천연가스의 경우 이미 전량 현물시장 가격에 기반을 둔 거래로 바뀌었고, 노르웨이産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카타르, 북아프리카産 천연가스는 여전히 원유가격에 기반을 둔 장기계약에 의해 유럽수출이 이루어진다.<sup>28)</sup> 이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가격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특징을 갖는다.<sup>29)</sup>

<그림 15>는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변화(2013~16년)를 무게, 가격, 가치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무게와 가치기준의 변화는 각각 <표 9>와 <표 10>에 제시된 실측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에너지 품목의 가격변화는 <식 1>과 <식 2>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무게와 가치기준의 수입변화와 가격변화를 비교해 보면, 무게기준으로 석유의 수입규모는 변화가 미미하고(-1.1%), 천연가스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석탄의 경우 무게기준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3대 에너지 원자재는 2013~16년의 기간 중 모두 가격폭락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석유와 가스에 있어서 가격하락은 수입규모(가치기준)가 급감한 대부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식 2>를 통해 구한 가격변화가 실제가격 변화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6>에서는 이 값을 실제가격변화와 비교하였다. 비교

25) 에너지신문, “산년기고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과 전망” (2016년 1월 1일)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1> (검색일: 2017. 7. 20).

26) Lance J. Bachmeier and James M. Griffin, “Testing for Market Integration Crude Oil, Coal, and Natural Gas”, *Energy Journal*, Vol. 27, pp. 55-71.

27) Shobhit Seth, “Do Oil and Natural Gas Prices Rise And Fall Together?” (March 25, 2015)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active-trading/032515/do-oil-and-natural-gas-prices-rise-and-fall-together.asp?gl=rira-baseline-vertical> (검색일: 2017. 7. 20).

28) Reuters, Most of Europe’s gas supplies still linked to oil prices (February 22,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energy-gas-europe-idUSL6N0BL8HO20130222>(검색일: 2017. 7. 20).

29) Gerard Reid, “Breakdow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il, gas and coal prices?” (April 8, 2015) <http://energyandcarbon.com/breakdown-of-the-relationship-between-oil-gas-and-coal-prices>(검색일: 2017.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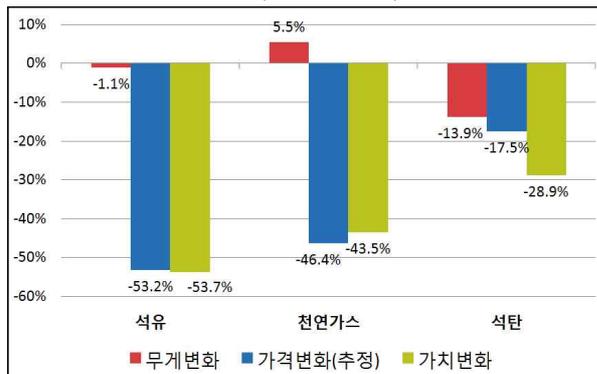
결과 실제 가격변화와 추정된 가격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품목은 석유이다. 천연가스  
와 석탄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데, 천연가스의 경우 가격으로 활용한 데이터가 러시아産  
천연가스의 독일 인도분 가격이었다는 점, 공급방식의 특성 상 국제가격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차이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석탄 가격의 경우 비교 기  
간 중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시아 경제제재 기간 중 대러시아 수입은 급감하였으나, 이 현상은 대러시  
아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의 수입이 급  
감하였으나, 이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무게 기준에서의 에너지 수  
입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대러시아 수입에 있어 에너지 품목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사  
실이나, 이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에너지 수입규모(가치기준)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식 1> 
$$\frac{v_{i16} - v_{i13}}{v_{i13}} = \frac{m_{i16}p_{i16} - m_{i13}p_{i13}}{m_{i13}p_{i13}}$$
 2013~16년 기간 중 대러시아 수입변화율

<식 2> 
$$\left(\frac{v_{i16}}{v_{i13}}\right) \times \left(\frac{m_{i13}}{m_{i16}}\right) = \frac{p_{i16}}{p_{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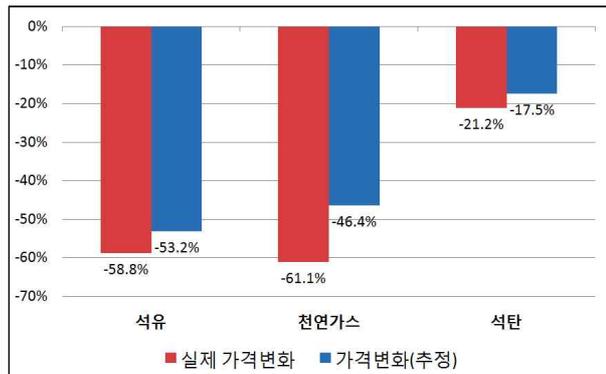
$m_{it}$ : 품목  $i$ 의  $t$ 년도 수입(무게),  $p_{it}$ : 품목  $i$ 의  $t$ 년도 수입가격,  $v_{it}$ : 품목  $i$ 의 총수입(가치기준)

<그림 15>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변화(2013~2016년)



주: 무게변화와 가치변화는 각각 <표 9>와 <표 10>에 제  
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가격변화는 <그림 14>에  
제시된 월별 가격의 연간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Eurostat, Indexmundi.com

<그림 16> 실제 가격변화와 추정가격 변화의 비교



주: 추정가격의 변화는 <식 1>과 <식 2>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Eurostat, Indexmundi.com

## 2. 품목별 검토

다음은 품목별 대러시아 수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급격한 수입감소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2013~16년의 기간 중 대러시아  
수입은 881억 달러가 줄어들어, 42.6% 감소를 기록하였다. 품목 별로 가장 큰 폭의 수입

감소를 기록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포함되는 '5. 광물성 생산품'이다. 같은 기간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은 826억 달러가 감소하여 51.1%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총수입 감소의 대부분이 이 분야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HS 코드의 부(部) 기준(21개)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수입감소를 기록한 품목의 비중은 9개 항목이며, 그 비중은 2016년 기준 73.3%이며, 수입증가를 기록한 품목은 13개 품목이며, 그 비중은 9.6%이다. 2016년 대러시아 수입 중 66.5%를 차지하는 광물성 생산품을 제외할 경우, 수입감소를 기록한 품목의 비중은 6.7%로 축소된다. 이를 종합하면, 대러시아 수입급감은 사실상 에너지 수입의 극감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이 변화는 에너지 원자재의 가격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11> 품목별 대러시아 수입의 변화(2013~2016년)

품목(HS 부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3~16년 변화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변화율
1. 고기 등 동물성 생산품	408	0.20	457	0.25	549	0.40	574	0.48	165	40.4
2. 식물성 생산품	441	0.21	520	0.29	533	0.39	637	0.54	197	44.6
3. 동식물성 기름	441	0.21	144	0.08	120	0.09	95	0.08	-346	-78.4
4. 조제식품, 음류, 주류, 담배	644	0.31	741	0.41	690	0.51	625	0.53	-19	-3.0
5. 광물성 생산품	161,679	78.12	137,779	75.53	93,191	68.32	79,100	66.54	-82,580	-51.1
6. 화학 생산품	6,032	2.91	6,069	3.33	5,139	3.77	4,128	3.47	-1,904	-31.6
7. 플라스틱, 고무	1,336	0.65	1,194	0.65	1,267	0.93	1,335	1.12	-1	-0.1
8. 가죽 생산품	227	0.11	199	0.11	141	0.10	128	0.11	-99	-43.6
9. 목재 생산품	1,479	0.71	1,612	0.88	1,620	1.19	1,735	1.46	256	17.3
10. 펄프, 종이류	500	0.24	515	0.28	552	0.40	543	0.46	43	8.6
11. 섬유	70	0.03	83	0.05	79	0.06	94	0.08	24	34.5
12. 신발류	10	0.00	8	0.00	8	0.01	10	0.01	-1	-6.8
13. 시멘트, 유리제품	129	0.06	147	0.08	175	0.13	248	0.21	119	92.1
14. 귀금속류	3,218	1.55	3,588	1.97	3,010	2.21	4,378	3.68	1,159	36.0
15. 비금속 제품	385	0.19	362	0.20	465	0.34	512	0.43	126	32.8
16. 기계, 전기기기	1,257	0.61	1,251	0.69	1,438	1.05	1,268	1.07	12	0.9
17. 운송장비	704	0.34	724	0.40	911	0.67	1,053	0.89	350	49.7
18. 광학, 정밀기기	181	0.09	138	0.08	171	0.13	190	0.16	9	5.2
19. 무기류	9	0.00	7	0.00	11	0.01	11	0.01	2	23.0
20. 잡품	95	0.05	112	0.06	100	0.07	111	0.09	16	16.9
21. 예술품	21	0.01	30	0.02	10	0.01	15	0.01	-6	-27.9
기타	3,154	1.52	2,661	1.46	2,231	1.64	1,727	1.45	-1,428	-45.3
총수입	206,972	100	182,418	100	136,409	100	118,881	100	-88,091	-42.6

주: HS 코드의 부 단위로 분류를 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품목명칭은 간소화하였음. 정확한 품목명칭은 번호를 참조할 것.

자료: Eurostat.

### 3.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변화

그렇다면 국가별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2>에서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에 있어 총 역외수입 중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을 살펴봄에 있어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이 품목들의 대러시아 수입을 보고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석탄의 경우 2013~2016년의 기간 중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은 28.2%에서 31.0%로 오히려 2.8%p 증가하였다. 수입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5개국에 불과한데, 큰 폭의 수입증가를 기록한 다수의 국가

들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제재의 여파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유와 가스의 경우 2013~16년의 기간 중 원유는 1.4%p, 가스는 4.8%p의 수입비중 감소를 기록하였다. 자료가 확보된 22개국 중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13개국이며, 증가한 국가는 9개국이다. 수입비중이 감소한 국가 중 공통된 특징(지리적 위치, 산유국 유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천연가스의 경우, 10개국이 수입비중 감소를, 12개국은 수입비중 증가를 기록하였다. 수입비중이 감소한 국가들은 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나, 원유보다는 수입비중의 감소폭이 높다. 반면에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은 오히려 수입비중이 증가하였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비중의 변화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난 국가들(폴란드, 크로아티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다수 존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입비중 변화가 미미하고, 독일의 수입비중은 특히 천연가스에 있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CFSF를 통한 제재의 경우 주로 EU 내 강대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대러시아 에너지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다른 조달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러시아 자체도 원유, 가스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수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제재가 EU의 외교안보와 에너지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되, 대러시아 원유, 가스의 수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이 경제제재의 핵심이며, 그 결과 에너지 수입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회원국별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변화(2013~2016년, %)

석탄류(HS2701)				원유(HS2707)				천연가스(HS2711)			
수입국	2013	2016	변화(p%)	수입국	2013	2016	변화(p%)		2013	2016	변화(p%)
핀란드	63.7	54.3	-9.5	크로아티아	60.5	15.1	-45.4	리투아니아	100.0	43.8	-56.2
영국	38.5	29.0	-9.4	그리스	30.0	12.3	-17.7	헝가리	95.5	73.9	-21.5
폴란드	63.0	55.4	-7.6	불가리아	94.7	79.2	-15.4	키프로스	25.8	6.2	-19.6
스웨덴	30.6	23.2	-7.4	폴란드	95.8	80.4	-15.4	그리스	68.5	57.4	-11.2
슬로바키아	42.3	42.0	-0.3	헝가리	94.5	80.1	-14.4	EU-28	30.2	25.4	-4.8
리투아니아	99.3	100.0	0.7	리투아니아	98.1	85.2	-12.9	루마니아	90.1	85.4	-4.7
헝가리	0.3	1.3	0.9	이탈리아	17.1	11.3	-5.8	체코	99.3	96.2	-3.1
EU-28	28.2	31.0	2.8	스페인	12.5	10.0	-2.4	슬로베니아	98.7	96.7	-2.1
라트비아	96.9	99.6	2.8	핀란드	90.9	88.6	-2.3	벨기에	0.7	0.3	-0.4
스페인	17.3	20.3	3.1	EU-28	32.9	31.6	-1.4	슬로바키아	99.7	99.4	-0.3
에스토니아	95.7	99.9	4.1	오스트리아	13.4	12.1	-1.3	스페인	0.2	0.1	-0.2
아일랜드	11.5	15.7	4.2	영국	7.4	6.1	-1.3	에스토니아	99.9	100.0	0.1
네덜란드	16.8	21.4	4.6	프랑스	11.9	11.0	-0.9	영국	0.0	0.4	0.4
이탈리아	20.1	25.3	5.2	스웨덴	47.7	47.2	-0.5	프랑스	2.7	3.1	0.4
프랑스	15.6	24.4	8.8	에스토니아	100.0	100.0	0.0	불가리아	94.7	95.2	0.4
벨기에	32.9	45.9	13.0	슬로바키아	100.0	100.0	0.0	네덜란드	3.5	6.0	2.5
독일	41.8	58.6	16.8	체코	63.3	64.6	1.3	라트비아	97.0	100.0	3.0
불가리아	24.9	45.7	20.8	루마니아	42.1	44.4	2.3	이탈리아	43.5	46.6	3.1
체코	22.7	45.3	22.7	독일	40.4	43.3	2.8	핀란드	86.8	93.9	7.1
오스트리아	3.7	26.5	22.8	네덜란드	38.3	43.6	5.3	폴란드	59.4	69.2	9.7
루마니아	48.1	86.5	38.5	벨기에	33.2	41.1	8.0	크로아티아	23.2	40.1	16.8
그리스	53.2	98.2	45.0	덴마크	4.1	17.0	13.0	스웨덴	4.4	23.6	19.2

크로아티아	20.1	68.1	48.0	포르투갈	4.6	23.9	19.3	독일	12.7	66.0	53.4
슬로베니아	10.3	96.7	86.5								

주: 1) 가치기준으로 계산. 2) 품목별 수입데이터가 없는 국가의 경우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3)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감소한 국가임을 뜻함.

자료: Eurostat.

### 3. 대러시아 수출변화

<표 13>은 품목별로 2013~16년의 기간 중 EU의 대러시아 수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하였다. 앞서 대러시아 수입감소가 대부분 에너지 품목의 수입감소에 의해 주도되는데 반해, 대러시아 수출은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하였다. 우선 총수출은 거의 4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규모기준, 가장 큰 폭의 수출감소를 기록한 품목은 2013년 기준 대러시아 수출의 각각 31.6%와 16.3%를 기록했던 '16. 기계 및 전기기기', 그리고 '17. 운송장비' 분야로 두 분야는 수출이 각각 160억 유로와 96억 유로 감소하였다. 변화율 측면에서 가장 큰 수출감소를 기록한 품목은 러시아의 수입금지 대상이 된 '1. 고기 등 동물성 생산품'이다. 이 품목은 2013~16년의 기간 중 수출이 1/10으로 급감하였다.

대러시아 수출감소가 전 품목에 걸쳐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경제제재는 금융기관 및 일부 품목의 수출승인제, 군수품목의 수출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러시아의 맞대응은 수입금지로 구성된다. EU의 제재는 기존의 에너지 수요-공급 관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반면, 러시아의 맞대응은 수입선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둘째,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 품목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제, 외교관계 악화 시 고르게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러시아의 대체수입선 확보노력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셋째, 같은 기간 러시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점도 EU의 대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러시아의 총수입은 3,413억 달러에서 1,916억 달러로 43.9%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 감소폭은 러시아의 대EU 수입감소폭(39.4%)을 상회하는 것이다.

<표 13> EU의 품목별 대러시아 수출 변화(2013~2016년)

품목(HS 부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3~16년 변화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변화율
1. 고기 등 동물성 생산품	3,351	2.81	1,456	1.41	395	0.54	350	0.48	-3,001	-89.6
2. 식물성 생산품	3,304	2.77	2,471	2.39	1,261	1.71	1,283	1.77	-2,021	-61.2
3. 동식물성 기름	243	0.20	286	0.28	190	0.26	230	0.32	-12	-5.1
4. 조제식품, 음류, 주류, 담배	4,881	4.09	4,748	4.60	3,563	4.83	3,594	4.97	-1,287	-26.4
5. 광물성 생산품	1,367	1.14	1,006	0.97	777	1.05	687	0.95	-680	-49.7
6. 화학 생산품	16,979	14.21	16,129	15.62	13,159	17.84	13,345	18.44	-3,633	-21.4
7. 플라스틱, 고무	5,809	4.86	5,323	5.16	4,326	5.87	4,247	5.87	-1,562	-26.9
8. 가죽 생산품	743	0.62	605	0.59	396	0.54	406	0.56	-338	-45.4
9. 목재 생산품	678	0.57	605	0.59	403	0.55	305	0.42	-373	-55.0
10. 펄프, 종이류	2,398	2.01	2,113	2.05	1,717	2.33	1,679	2.32	-720	-30.0

30) RT, "Russia's import ban means big business for Latin America," (August 9, 2014)

<https://www.rt.com/business/178664-latin-america-benefits-russia-ban/>(검색일: 2017. 7. 17);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Russian food import ban benefits Vietnam," (September 6, 2014)

[http://seafood.vasep.com.vn/whybuy/657\\_9972/russian-food-import-ban-benefits-vietnam.htm](http://seafood.vasep.com.vn/whybuy/657_9972/russian-food-import-ban-benefits-vietnam.htm)(검색일: 2017. 7. 17).

11. 섬유	4,416	3.70	4,084	3.96	2,923	3.96	2,913	4.03	-1,502	-34.0
12. 신발류	1,376	1.15	1,130	1.09	734	1.00	733	1.01	-643	-46.7
13. 시멘트, 유리제품	1,687	1.41	1,515	1.47	1,024	1.39	964	1.33	-723	-42.8
14. 귀금속류	227	0.19	160	0.16	108	0.15	121	0.17	-105	-46.5
15. 비금속 제품	5,788	4.85	5,135	4.97	3,674	4.98	3,419	4.72	-2,369	-40.9
16. 기계, 전기기기	37,729	31.59	33,329	32.29	23,609	32.01	21,725	30.01	-16,005	-42.4
17. 운송장비	19,413	16.25	14,668	14.21	8,836	11.98	9,841	13.60	-9,572	-49.3
18. 광학, 정밀기기	4,312	3.61	3,777	3.66	2,878	3.90	2,950	4.08	-1,363	-31.6
19. 무기류	70	0.06	50	0.05	29	0.04	20	0.03	-50	-71.3
20. 잡품	3,635	3.04	3,300	3.20	2,419	3.28	2,220	3.07	-1,415	-38.9
21. 예술품	146	0.12	145	0.14	78	0.11	192	0.27	46	31.9
기타	311	0.26	552	0.53	690	0.94	520	0.72	209	67.1
대러시아 총수출	119,449	100	103,225	100	73,747	100	72,381	100	-47,068	-39.4

주: 1) HS 코드의 부 단위로 분류를 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품목명칭은 간소화하였음. 정확한 품목명칭은 번호를 참조할 것. 2) '기타'는 류 기준 99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품목임.

자료: Eurostat.

## V. 결론

이 연구는 EU의 높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제재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제재 직전 러시아는 EU의 제2위 수입국으로 EU는 역외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또한 총 에너지 수출의 70%가 대EU 수출일 정도로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수요자-공급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EU의 에너지 의존도는 50% 내외로 에너지 수입이 필수적인 반면, 러시아의 경우 총수출의 70%가 석유·가스일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측의 에너지 수출입 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외교적 당위성과 경제적 실리 간에 충돌로 인해 매우 미묘한 국제정치 환경을 형성했고, 경제제재는 그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양측의 상호제재 속에서 지난 3년간 EU-러시아 무역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같은 기간 진행된 유가하락 현상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2013~16년의 기간 동안 대러시아 수입은 43%가 감소하였다. 수입급감을 주도한 품목은 총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품목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54%, 44%, 29%의 수입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치기준이 아닌, 물량기준(kg)으로 살펴보았을 때, 석유의 수입은 1% 감소하는데 그쳤고, 천연가스의 경우 오히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기준과 물량기준의 수입변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기간 에너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2017년 6월의 기간 중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47.2%와 38.3% 감소하였고, 2016년 중에는 최고점 대비 60% 이상의 가격하락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감소는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제재 이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변화하는 지 여부를 EU는 물론, 회원국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교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3~16년의 기간 중 EU의 총역외 에너지 수입에 있어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의 경우,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고, 석유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천연가스의 경우 5%p 가까운 감소를 보였으나, 감소현상은 대부분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발생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독일의 경우 오히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비중을 크게 늘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경제제재가 소기의 의도대로 기존의 에너지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러시아의 맞대응이 에너지 수출금지 등이 아닌, 농산품 수입금지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3~16년의 기간 중 39.4% 감소하였다. 거의 대부분

의 품목에서 수출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러시아의 수입금지 대상이 포함된 동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60~90%의 수출감소를 기록하였다. 대러시아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기계 및 전기기기, 운송장비에서는 40% 이상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출감소는 EU의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 내 반EU 정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같은 기간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수요 자체가 극감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는 EU의 공동외교정책에 관한 것이다. EU 차원의 제재는 EU 회원국 간 외교정책에 있어 수렴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러시아 제재와 같이 회원국 간 경제적 이익이 다를 경우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sup>31)</sup> 에너지 안보에 민감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의 외부에서 아드리아-발트-흑해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32)</sup>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에 따른 불안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경우, EU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 또는 단일에너지시장이 설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경우, 공동외교안보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들이 상이한 행보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이 사례는 외교적 마찰 가운데, 경제적 실익을 보존하는 정교한 대외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외교적 대립과 경제적 실익 간의 미묘한 균형이 전개되면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자무역 및 에너지 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실익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외교적 압박수단의 정교한 설계와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국내외 변수 및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며, 이는 국내 대외정책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국가보다 외교적 명분과 안보, 경제적 실익 간에 균형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

31) 전해원 (2016), p.14.

32) 2015년 발족한 아드리아-발트-흑해 이니셔티브(Adriatic-Baltic-Black Sea Initiative, TSI: Three Seas Initiative)는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은 다음과 같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이상 비셰그라드 4),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발트 3국),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참고문헌

- 강유덕·이현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47(2014년 9월 5일).
- 박정호·성원용·강부균,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연구에너지신문, “신년기고: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과 전망” (2016년 1월 1일)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1>(검색일: 2017. 7. 20).
- 전혜원,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3 (2016).
- 한국은행, <http://youth.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do?bbsId=6&mode=view&contentId=3287>(검색일: 2017. 7. 15.)
- Bachmeier, Lance J. and James M. Griffin, “Testing for Market Integration Crude Oil, Coal, and Natural Gas”, *Energy Journal*, Vol. 27, pp.55-71.
- BBC, "Russia's trade ties with Europe" (March 4, 2014),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6436291>(검색일: 2017. 7. 18).
- Benkovskis, Konstantins, Jūlija Pastušenko and Julia Wörz, *Assessing the Full Extent of Trade Integration between the EU and Russia-A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Bank of Latvia (2014).
- Birol, Fatih, *Outlook for European Gas Demand, Supply and Investment to 203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May 5, 2005).
- Bond, Ian, *The EU and Russia Uncommon Spaces*, Centre for European Reform (April 2014).
- Cashen, Emily,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World Finances* (April 20, 2017), <https://www.worldfinance.com/special-reports/the-impact-of-economic-sanctions>(검색일: 2017. 7. 15).
- De Vries, Anthonius W., Clara Portela and Borja Guijarro-Usobiaga,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 Checklist for the EU," CEPS Special Report No. 95 (November 2014).
- Dreyer, Iana and José Luengo-Cabrera, "Introduction," Ana Dreyer and José Luengo-Cabrera, ed., *On Target? EU Sanctions as Security Policy Tools*,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Paris, September 2015).
- Elliott, Kimberly Ann, Evidence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Economic Sanctions, Speech given before the Subcommittee on Trad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23, 1997) <https://piie.com/commentary/testimonies/evidence-costs-and-benefits-economic-sanctions>(검색일: 2017. 7. 15);
- Elliott, Kimberly Ann and Gary Clyde Hufbauer, "In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Same Song, Same Refrain? Economic Sanctions in the 1990'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2 (1999), pp.403-408.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April 16, 2014).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Russia* (May 3, 2017).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in force* (April 26, 2017)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restrictive_measures-2017-04-26-clean.pdf)(검색일: 2017. 7. 15).
- European Parliament, *EU-Russia Energy Relations - Stuck together?* (March 2015)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5/551343/EPRS\\_ATA\(2015\)551343\\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5/551343/EPRS_ATA(2015)551343_EN.pdf)(검색일: 2017. 7. 15).
- European Union Newsroom, *Highlights: EU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crisis*, [https://europa.eu/newsroom/highlights/special-coverage/eu-sanctions-against-russia-over-ukraine-crisis\\_en](https://europa.eu/newsroom/highlights/special-coverage/eu-sanctions-against-russia-over-ukraine-crisis_en)(검색일: 2017. 7. 18).
-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 Forbes*, "U.S. L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Taking Diversification Seriously" (July 11, 2017), <https://www.forbes.com/sites/thebakersinstitute/2017/07/11/u-s-lng-in-cee-diversification/#374e76104d0a>(검색일: 2017. 7. 20).
- Havlik, Peter,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Ukraine Conflict,"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Policy Notes and Reports*, No.14 (November 2014).
- Hufbauer, Gary Clyde, Jeffrey J. Schott, Kimberly Ann Elliott and Barbara Oegg,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June 2009).
- Index Mundi, <http://www.indexmundi.com>.
- Kaempfer, William H. and Anton D. Lowenberg,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Sanctions," Todd Sandler and Keith Hartley, ed., *Hand book of Defense Economics*, Vol. 2 (Elsevier, 2007), p.874.
- Parker, Richard, "The Problem with Scorecards: How (and how not) to Measure the Cost-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0), pp.235-294.
- Reid, Gerard, "Breakdow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il, gas and coal prices?" (April 8, 2015), <http://energyandcarbon.com/breakdown-of-the-relationship-between-oil-gas-and-coal-prices>(검색일: 2017. 7. 20).
- Reuters*, Most of Europe's Gas Supplies still Linked to Oil Prices (February 22,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energy-gas-europe-idUSL6N0BL8HO20130222>(검색일: 2017. 7. 20).
- Romanova, Tatiana, *The Impact of Sanctions on Russia'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hatham House,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Meeting Summary(March 24, 2015).
- RT*, "Russia's import ban means big business for Latin America," (August 9, 2014) <https://www.rt.com/business/178664-latin-america-benefits-russia-ban/>(검색일: 2017. 7. 17).
- Seth, Shobhit, "Do Oil and Natural Gas Prices Rise And Fall Together?" (March 25, 2015)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active-trading/032515/do-oil-and-natural-gas-prices-rise-a>

nd-fall-together.asp?lgl=rira-baseline-vertical(검색일: 2017. 7. 20).

Smith, Keith C., *Russia-Europe Energy Relations: Implications for US Polic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ebruary 2010).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Russian food import ban benefits Vietnam" (September 6, 2014), [http://seafood.vasep.com.vn/whybuy/657\\_9972/russian-food-import-ban-benefits-vietnam.htm](http://seafood.vasep.com.vn/whybuy/657_9972/russian-food-import-ban-benefits-vietnam.htm)(검색일: 2017. 7. 17).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the European Union* (May 18, 2015).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Russian Federation* (August 24, 2016).

# Development of EU-Russia Trade Relation after EU's Sanction on Russia and EU's Energy Import

Yoo-Duk Kang<sup>33)</sup>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U is highly dependent on Russia for its fossil energy imports a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U-Russia trade after EU's sanction against Russia over Ukraine crisis. Before the sanction, Russia was EU's second largest importer and it used to import more than 70% of its energy imports from Russia. The latter export 70% of its total energy export to the EU. The EU and Russia have a typical relation of consumer and supplier in fossil energy.

During the post sanction period (2013~2016), the EU's import from Russia fell by 43%. The fall of the import has been most notable in energy products which account for 70% of EU's total import from Russia; import of crude oil, natural gas and coal reduced by 54%, 44% and 29 % respectively. However, the decrease of energy import is small in terms of net mass (weight). Import of crude oil declined only by 1% and import of the natural gas increased by 6%. This discrepancy between imports in value and net mass is mainly due to a drastic slide in oil prices during the same period. In reality, EU's import volume from Russia did not decline, given the fall in prices.

Regarding EU's energy dependency on Russia, the EU Member States are still much dependent on the import from Russia for its energy products and the sanction did not change much the share of Russia in total energy import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no a structural change in EU'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since the sanction. This means that the sanction was carefully designed in order not to affect EU-Russia relation in energy, while it drew a lot of atten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anction and related trade development provide useful implication for Korea's external policy, given Korea's geopolitic location, which requires a balanced approach between diplomatic cause,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

Keywords: European Union (EU), sanction, Russia, Ukraine, energy dependence, petrol, natural gas

---

33) Assistant Professor, Language and Trade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